

종합·해설

민주, 광주 동구 무공천 파장 어디까지 범지나

후보들 “무소속 출마”… 총선 판도 요동

민주통합당이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한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민주당 예비후보 대부분이 무소속 출마를 검토중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시민 후보’ 추대를 계획하고 있어 광주 동구 선거구가 무소속 후보들 간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불법 선거인단 모집’ 지도부 대안부재 불만

후보 난립에 지역 민심 갈기 갈기 찢어질 판

◇총선구도 급변=광주 동구가 무

공천지역이 되면서 현재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4명은 4·11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을 내리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는 박주선·양형일·이병훈·정영재 등 4명으로, 이들은 현재 지역여론 추이를 살피며 무소속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후보는 “개인적인 아쉬운 점은 있으나,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거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 측 주변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형일 후보도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는 것”이라면서 “총선에 출마해 주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후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무소속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는 뜻을 보였다. 정영재 후보는 “무소속 출마는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는 기존 박·박동수 무소속 후보 2명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 등 총 5~6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왜 무공천인가?=민주당이 광주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한 데는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에 대한 흥해진 지역 민심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해석된다. 당시 도부가 ‘개혁 공천’으로 밀어붙인 ‘모바일 경선’이 더 이상 흡집니면 안 된다는 지도부의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당시 도부가 선거인단 불법모집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벌여놓고도 아무런 대안 없이 ‘무공천’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대한 지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단기처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의 ‘무공천’ 조치에 대해 나빠진 민심을 우선 잠재우고, 선거 후 당선자를 입장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끝곳에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투신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음에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무공천’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목숨까지 앗아간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되면서 운동원들로부터 ‘꼴목마다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적도 많았다’고 들었다”며 “만약 모두가 무소속으로 본선으로 치른다면 각 후보 지지자를 사이에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후보를 낼 경우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정한 경선방법이 과열을 불렀고, 이 과정에서 ‘투신 자살’ 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무공천은 정당이 책임지는 자체가 아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심갈등 조장 우려도=5~6명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경우 선거를 통한 지역민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 동구 유권자가 9만 여명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지지후보들에 따라 지역민심도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촉발된 각 후보 지지자들간 갈등이 본선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격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되면서 운동원들로부터 ‘꼴목마다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적도 많았다’고 들었다”며 “만약 모두가 무소속으로 본선으로 치른다면 각 후보 지지자를 사이에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 후보를 낼 경우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총선 홍보 포스터 준비 오는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38일 앞둔 4일 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보낼 총선 홍보 포스터와 팜플릿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죄추정 원칙에 북구 갑·을, 장성·나주 일단 심사

■ 민주,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 지역구 공천 어떻게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모집 의혹 여파가 해당 후보자 공천심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문제가 불거진 지역구는 광주시 동구를 포함한 북구 갑·북구 을, 장성·나주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혹을 산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심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주시 동구 지역구와 같이 문제가 큰 지역에 한해선 무공천 지역

결정 등의 초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더라도 향후 문제가 생기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심사가 좋은 후보를 뽑는 일인 만큼 법리적인 판단보단 상식선에서 판단, 해당 후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천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심사과정에서 문제 후보들에게 폐널티를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론조사보다 다면평가 ‘이중잣대’ 논란

현역들 반발 “탈락땐 무소속 출마” 불사

■ 민주 호남 공천 심사 어떻게 이뤄졌나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심사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다면평가 비중을 크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당 공심위는 지난 2~3일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4·11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끼리 다면 평가가 실시됐다.

다면 평가에서는 선수별(초선·재선·다선 등)과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했으며, 질문 내용은 ▲국회의원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 ▲합리적 조정 능력과 대(對)국민 현신성 ▲민주당의 정체성·이념 구현 정신 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공심위가 호남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다면 평가에 큰 비중을 두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

다. 호남지역 현역 의원에 대해서만 다면 평가 비중을 크게 적용한다는 것은 공천심사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다면 평가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을 마련해 심사한 뒤 일반 공천신청자의 심사 배점기준인 의정 및 사회활동 점수(10점)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다. 심사 배점기준은 정체성(20점)·기여도(10점)·의정 및 사회활동(10점)·도덕성(10점)·후보 적합도 및 경쟁력(30점)·면접(20점) 등이다.

하지만 호남의 경우 다면 평가에 큰 비중을 둔 이유는 경쟁력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준의 적합도 조사만으로는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주 지역 한 현역 의원은 “호남 지역만 다면 평가 비중을 크게 적용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태명 청장 사과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이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불법선거 혐의에서 전직 동장이 투신 자살한지 닷새만인 2일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유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청장으로서 구민과 시민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깊이 반성하며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정치 1번지”로 지난 반세기 한국 정치발전을 주도해온 동구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화순 모식당에서의 동장단 모임 참석과 관련 “동장 상조회의 정례 모임이 관권 선거를 횡령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책임자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소명한 만큼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중평정

- 김종우



與小野大면 또 상황이...

HITEJINRO

소주는 깨끗함이다
소주는 이슬이다

100% 천연원료로
이슬같은
깨끗함

참이슬 전속모델
유아인

참이슬 전속모델
문채원

광주전남 사랑기금 2억원 조성